

“고사위기 석유화학 살릴 특별법 제정 시급”

주철현 의원 등 여야 11명 주최 국회 공청회

세계·자금·전기요금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국내 대표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권과 울산, 충남 서산의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이번 공청회의 공동주최로 참여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힘을 모았다.

주철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 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와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제도적 뒷받침이 담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업계와 학계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여수산업 기업들의 경영 악화와 고용불안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설명하며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이에 따른 전폭적인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불황 국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연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복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기업합력법’ 개정 등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경우 인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도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롯데케미칼과 HGC현대케미칼, SK지오센트릭 등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석유화학 기업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석화 지원

특별법 제정이 이른 시일에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광기섭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사업재편 신청 과정에서 ‘변경 공시’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감홍수 SK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직자·이직자 대상 재교육 등 맞춤형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요구에 화답했다.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공정위도 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며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석유화학 기업 간의 M&A(인수합병)는 최대한 빠른 심사

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의 혁신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는 이번 위기를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최전선에 있는 산자부와 공정위가 더욱 헌신적으로 힘써 주기를 바란다. 국회도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100억 추가 지원

시, 경기둔화 대응…상반기 300억 등 올해 총 400억원

광주시는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3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에 100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400억원을 지역 중소기업에 용자로 제공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가 연초 발표한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 소비·착한 금융·착한 일자리)’의 하나로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이다.

지원 내용은 사실자금 10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3억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광주시가 인증한 우대기업은 최대 1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시중보다 낮은 연 2.12%로, 광주시는 중앙부처의 금리 공지를

참고하되 지역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 이 수준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0.5%포인트를 추가 인하여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최근 운전자금 위주 편중 현상을 개선해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운전자금은 상환기간이 지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자금 신청은 1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관리하는 기업용 자원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중앙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8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새 코스 운영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가을을 맞아 다양한 테마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가을 코스는 단풍 명소와 아름다운 해변 등 가을 풍경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역사 유적지 등을 경유하는 21개의 새로운 코스로 구성됐다.

주요 코스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연계한 목포·해남·진도 수목 여행 △두문마을과 무솔목 해변, 오동도를 경유하는 여수 배네치아 여행 △전남산림자원연구원과 천사대교, 안좌 펄프섬을 거니는 나주·신안 여행 △곡성 도립사와 구례 천은사, 출렁다리를 걷는 곡성·구례 주말여행 등이다.

오는 10월 목포에서 열리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특별 코스와 반려견 동반 여행, 1박 2일 남도한바퀴 등 특별 코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예약은 남도한바퀴 홈페이지(<http://citytour.jeonnam.go.kr>) 또는 전용 콜센터(062-360-8502)를 통해 가능하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암록달록 물들어가는 남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본회의장 한복과 상복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복과 상복을 입은 여야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행보

전남 주민-귀농어귀촌인 잇는 ‘어울림마을’ 호응

전남도가 귀농어귀촌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이 지역 곳곳에서 성과를 거두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은 전입 10년 이내 귀농·귀촌 가구가 포함된 마을을 대상으로 경관 조성, 마을 융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주민 간 화합과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마을 꽃길 조성, 벽화그리기 등 경관 개선 사업과 선진지 견학, 악기배우기 등 공강·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 간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활동이 진행됐다.

올해는 12개 시군, 26개 마을에서 추진되며, 총사업비 3억90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을 들여 마을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123개 마을을 지원했다. 귀농어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상호 이해 증진, 공동체 회복, 마을 정주 여건 개선 등 뚜렷



12개 시·군 26개 마을 포함
2019년부터 총 123곳 지원

꽃길 등 경관 개선 프로그램
소통·공동체 회복·정착 도와

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매년 40여 개 마을이 꾸준히 신청할 만큼 효과성과 현장 만족도도 높다.

실제 나주 월해마을 이장 김형중 씨는 “마을 꽃길을 함께 조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귀농어귀촌인들과 어울리게 됐고, 이웃 간 대화도 많아졌다”며 “마을 분위기가 훨씬 밝아져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장성 수산2리 마을 이장 박래영 씨도 “사업을 계기로 마을이 누구나 찾아오고 살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한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 고양에서 2022년 귀농한 한 주민은 “처음에는 마을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사업을 통해 선배 주민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다”며 “지금은 든든한 이웃을 얻은 것 같아 정착에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도 ‘살고 싶은 농산어촌 구현’을 목표로 맞춤형 도시민 유치 활동과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등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민 전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며 “귀농어귀촌인과 지역 주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따뜻한 전남형 공동체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

